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흰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허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정책실 간사 이승희 : 796-8364)  
제 목 한보사건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날 짜 1997. 2. 18. (총 10 쪽)

## 보도자료

### 한보 사건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참여연대, 한길 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설문조사 실시

**“한보 진상 밝혀내지 못했다” 74.0% - 수사 결과에 강한 불만  
“특별검사제 필요하다” 80.8%  
“부패방지법 제정해야” 86.3%**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 김창국)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지난 15,16 양일간 전국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보사건에 관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2. 이번 설문의 응답자중 대다수는 한보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여야 정치인 및 김현철씨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와 같은 대형 부정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는 공직자 비리 특별조사부 신설, 뇌물수수 처벌기준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되었다.

별첨 : 한보사건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한보사건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 1. 조사의 개요

### ○ 표본설계(Sample Design)

차 원	내 용
(1) 모 집 단	1997년 2월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성인
(2) 조 사 기 간	97. 2. 15 ~ 16
(3) 표 본 크 기	703명
(4) 표본추출방법	지역/성별/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5)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전화면접법
(6)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69%

### ○ 표본의 특성

	구 성	
	사례수	%
■전 체	703	100.0%
□ 성 남 여	347	49.4%
	356	50.6%
□ 연 령 별		
20 대	193	27.5%
30 대	193	27.5%
40 대	132	18.8%
50 대 이 상	185	26.3%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고	170	24.3%
전 문 대 졸	266	38.1%
대 졸 이 상	39	5.6%
	224	32.0%

	구 성	
	사례수	%
□ 직업별		
농축/임/어업	70	10.0%
자영업/ 사업	79	11.2%
생산 / 기술	45	6.4%
사무/ 전문직	111	15.9%
공무원	34	4.8%
학생	67	9.5%
주부	198	28.3%
서비스업	48	6.8%
무직 / 기타	49	7.0%
□ 광역별		
서울	164	23.3%
부산/경남권	120	17.1%
대구/경북권	82	11.7%
인천/경기권	154	21.9%
호남권	82	11.7%
충청권	70	10.0%
강원도	23	3.3%
제주도	8	1.1%

## 2. 조사 결과 분석

문1> 한보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번 수사가 한보 사건의 진상을 얼마나 밝혀냈다고 보십니까?

- ① 충분히 밝혀냈다
- ② 어느 정도 밝혀냈다
- ③ 별로 밝혀내지 못했다
- ④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 ⑤ 잘 모르겠다

■ 한보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별로 밝혀내지 못했다’(55.6%) 나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18.4%)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반면, ‘충분히 밝혀졌다’고 평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에 불과했고,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답한 사람까지 합산해도 전체의 21.5%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응답자중 81.5%, 여자 응답자중 66.6%가 한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84.1%)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1-1>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장 미흡합니까?

- ① 김현철씨 관련 부분
- ② 관련된 여야 정치인
- ③ 관련 행정부처
- ④ 관련 은행장
- ⑤ 정보근씨 등 한보그룹내 관련 인사
- ⑥ 잘 모르겠다

■ 응답자의 54.2%가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흡한 부분은 김현철씨 관련 수사(16.2%), 관련행정부처에 대한 수사(13.0%) 순으로 지적되었다. 검찰이 이미 홍인길·권노갑·정재철·황병태 의원,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 등을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는 미흡하며, 김현철씨 등 권력핵심과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문2>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 전체응답자의 80.8%가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9.3%에 불과했다. 이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성격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3> 귀하는 한보사건과 같은 대형 부정비리를 막기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 ⑤ 잘 모르겠다

■ 응답자의 52.5%가 부패방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33.8%가 '찬성'을 포시함으로써 전체의 86.3%의 압도적인 다수가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4.3% 적극반대는 1.6%로 전체의 5.9%만이 부패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3-1> (찬성한다면) 부패방지법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 ① 돈세탁 방지 방안
- ②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 방안
- ③ 공직자 재산등록제 강화
- ④ 고위공직자 비리 특별조사부 신설
- ⑤ 뇌물 수수 처벌 기준 강화
- ⑥ 감사원 강화
- ⑦ 기타
- ⑧ 잘 모르겠다.

■ 부패방지법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조사부 신설'(41.6%)과 '뇌물수수 처벌기준 강화'(37.4%)가 지적되었다. 이는 부정부패에 관한 사정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역으로 그동안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4>** 검찰은 정치인이 대가없이 받은 돈, 즉 떡값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검찰의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 응답자의 82.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아무리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이 단순히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가 전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필요성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문 5> 만약 정치인이 대가 없이 받는 떡값을 인정한다면, 그 액수 제한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① 백만원 미만은 떡값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 ② 천만원 미만은 떡값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 ③ 5천만원 미만은 떡값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 ④ 1억원 미만은 떡값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 ⑤ 1억원 이상 떡값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 ⑥ 얼마든 일절 떡값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 ⑦ 잘 모르겠다

■ 응답자의 61.8%가 일절 떡값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답함으로써 대다수가 떡값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떡값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한선이 백만원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24.6%였으며, 천만원 미만이 5.0%, 5천만원 미만은 1.6%, 1억미만은 0.8%, 1억이상도 괜찮다는 사람은 0.7%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정치인이 떡값을 받는 것에 부정적이며, 검찰이 제시했던 '1억원'이라는 기준도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나타냈다.

문 6> 한보철강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기업이나 공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다른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기업을 해체하여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한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 기업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3%에 불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제3자 인수(30.3%)보다는 국민기업화나 공기업화(41.5%)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다. 이는 현재 한보철강을 인수할 업체로 현대 등 재벌기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한보철강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거부감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